

“호남고속철 3,220억 원안 통과 주력”

■ 지역 의원들 광주·전남 예산 증액·사수 총력전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광주~완도 고속도 반영 관심

광주 靑문화수도 조성사업 예산 263억 지키기 심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 반영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전남 출신의 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 조영택,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예산 대부분은 8일 오전까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상임위 지정 금액 대상 예산 일부만 논의되고 증액 대상 예산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감사 대상의 경우 그 폭을 줄이고 증액 대상의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주시=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예산의 경우 예초 정부는 205억을 반영했으나 국회 문방위에서 263억원을, 클린디젤차동차부품산업 육성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5억원만 반영했으나 국회 지정위에서 10억원으로 5억원을 추가해 이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문제는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20억원,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지원 18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65억원, 광주 태양광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20억원, 광주 LED실증센터 10억원 등 부처에서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새로 포함된 예산. 이 경우 한나라당 소속과 타지역 출신의 조정소위 위원들의 삭감 요구가 빚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이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예산이어서 이



여수 내교섭단체 주도하에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 민노당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대부분의 현안 예산은 9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수정예산안

을 통해 당초안보다 증액한 예산항목은 상임위를 그대로 통과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과제다. 추

기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3천220억원(500억원 추가), 압해-압태 새천년

대교 200억원(150억원 추가), 전주-광양 고속도로 3천910억원(400억원 추가), 목포-광양 고속도로 2천760억

원(200억원 추가), 전라선복선전철화 3천200억원(800억원 추가) 등이

다. 한나라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에 집중 투자하기로 공언하고 있는 만큼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산강 수계 하천 정비사업 663억원도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 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역시 여수공항 활주로 35억원과 무안 협정-해제 국도 4차선 확장공사 50억원,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30억원, 위그선 제작-운행 35억원 등 정부안에 없던 항목을 국회 상임위에서 포함시킨 예산. 또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수정)안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시킨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41억원(20억원 추가)과 친환경 양식기반 시설 73억원(22억원 추가) 등도 조정소위에서 감사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의 사수전략이 필요하다.

이밖에 정부와 국회 상임위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진입도로 개설 500억원, 무안기압도시 진입도로 개설 232억원, 다도해크루즈전용부두건설 400억원,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380억원, 고품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비 30억원 등을 예결위에서 반영토록 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시군유동회사 설립 운영 지원사업비(광주·전남 6억6천만원)의 경우 일단 40% 정도를 감액하기로 조정소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답변

“전남개발공사 조사권 발동하자”

전남개발공사가 원칙과 절차 없이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기병(나주1·민주) 의원은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이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황룡통행복마을 조성단지에는 분양 예상단가가 평당 100만 원 이상으

로, 분양성공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단지 지경과정부터 의혹투성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남 의원도 이날 “전남개발공사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권을 발동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알아달라”며 투명한 경영을 촉구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의욕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미숙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에 근거한 합리적 투자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프로젝트 원래 계획대로 추진”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개발사업) 대상 부지 축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 의원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를 축소 승인신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창남 의원(장흥·민주)은 이날 제237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J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삼호·구상·초송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승인신청된 개발지구를 2곳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J프로젝트는 최초 구상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도시조성 비용 3조2천억 원, 20조~40조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채권 등 사업규모도 전남도의 여건에 비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에 “유감스럽다”며 “사업지구 면적 축소는 있을 수 없으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전남에서는 다리 하나 길 하나 놓으려고 해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만큼, 미래를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와 의회, 국회, 정부가 협력해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 지방발전대책 발표 또 연기 왜?

수도권 규제 완화 상쇄할 지방대책 없어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 조치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지방발전 방안을 신속하게 내놓기 보다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는 등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27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지방발전 대책의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마련하겠

다는 명분으로 발표 시기를 이달 8일로 미뤘다가 지난 7일 당정협의 끝에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1주일 가량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된 배경은 수도권 규제 철폐 조치를 상쇄할 만한 지방발전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실무당정협의를 열었으나 ‘알맹이 없다’는 당의 지적에 따라 다시 발표 일정을 연기시켰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

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제당, 삼당 대책이 수두룩했고,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향도 불명확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들 간의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나왔던 건의사항들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다. 이날 당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부

분, ▲지방이전 기업의 용지확보 과정에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방에서는 ▲차등세율을 적용한 자주세금 방식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 ▲지방이 투자유치한 기업의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확대 및 상속세 감면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 검토’ 수준의 언급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발표되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무늬만 종합대책이고 내용은 기존의 지방대책을 구체

화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모임 등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도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가 건의한 지방살리기 정책 과제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지역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소속 의원들이 9일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광주·전남에 연고를 가진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철 민주당위원장과 주송용 전남도당위원장은 8일 “지역 연고를 가진 15명 내외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이종구, 임두성, 이정현, 김소남의

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9일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15+2 광역경제권 구상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현안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이와 별도로 내년 1월께 한나라당 소속의 광주·전남 연고 의원들을 전남 동부권을 초청,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순천만 습지, 광양제철, 여수산단 등을 둘러보고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홍남한셀학원

등·고·성·거울·방학·합·숙·특·강!!

2008년 12월 08일 - 2009년 02월 07일까지

1월 15일~ 1월 21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회 수업
1월 22일~ 1월 28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회 수업

학원은 입학(1년, 2년)과 사별 후 1년 이내 수험생 대상
1. 1월 15일~ 1월 21일 수업
2. 1월 22일~ 1월 28일 수업

23 대입 수험생들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2008년 12월 9일 발표되는 수능 정책패널, 시험패널, 시험전략, 명문대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 대학 배치, 장학금, 장학금 수 증가한다.

1. 1월 15일~ 1월 21일 수업
2. 1월 22일~ 1월 28일 수업

문의 : 061332-1111 www.hdssem.co.kr 홍남한셀학원